

일자리·춧불 민주주의·복지·공정경제 순

■국정위 ‘문재인 정부 12대 약속’ 들여다 보니

15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완성 ... 7~8개 과제 늘어날 수도

국정기획위원회가 구상하는 ‘문재인 정부의 12대 약속’ 가운데 첫 번째로 ‘일자리 창출’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12일 향후 국정과제 선정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12대 약속’(안)이 참고자료로 제출됐다.

이 참고자료에 따르면 1번 약속은 ‘소득 주도성장의 일자리 경제’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과제로는 ‘공공의 더 좋은 일자리 창출’, ‘민간의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중산층 서민의 가계소득 증대와 가계부채 감소’ 등이 꼽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 실린 ‘12대

약속’에서는 1번 자리에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 아래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즉, 국정기획위 논의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한 과제로 바뀐 것이다.

개혁 약속은 두 번째 약속에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들어갔다. 그 과제로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해결 등이 제시됐다.

3번 약속은 ‘사람을 책임지는 든든한 복지’였으며, 4번 약속은 ‘모두가 성장하는 공정경제’라는 제목으로 경제민주화, 대중중기업 상생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5

번 약속은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자치 분권’, 6번 약속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 7번 약속은 ‘출산·보육·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등이 자리했다.

또 8번 약속은 미세먼지 대책 및 안전 정책이 포함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대한민국’으로 제시됐고, 국방개혁 등을 포함하는 ‘강한 안보, 당당한 협력외교’가 9번 약속으로 꼽혔다.

10번 약속은 ‘원칙이 바로 선 한반도 평화변영’, 11번 약속은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공동체’가 언급됐고, 마지막 12번 약속으로는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이라는 약속이 제시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

국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 등을 12대 약속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는 참고자료일 뿐 국정과제를 이렇게 선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13~14일 기획본과 위원회 주관으로 국정과제들을 검토한 뒤에 15일 1차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앞서 국정기획위는 일자리 창출·4차산업 대비·저출산 극복을 국정 3대 우선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논의를 거쳐 중점과제를 더 추가할 수 있다”며 “7개~8개로 중점과제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극심한 가뭄에... 급수시설 물 채우기 극심한 가뭄으로 물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12일 광주 북구청 직원들과 소방서 직원들이 석곡동의 한 마을 급수시설에 물을 채우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광주·전남 주택 신규수요 감소 대비

다양한 유형 공공임대주택 제공해야”

나강열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소비개념 패러다임 대응 필요”

광주·전남지역의 주택재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저성장,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신규 주택수요는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실버주택, 청년지원주택, 공동체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2일 광주전남연구원 나강열 책임연구위원은 ‘광전리터스 INFO’에서 “주택이 과거 ‘소유’ 개념에서 ‘소비’ 개념으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책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되고 주택수요 다변화, 월세중심 임대시장 발전, 임대주택 정책이 활성화 되는 등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전남 주택시장 현황 분석 결과 주택재고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저성장, 인구고령화로 신규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택세입자들은 전국 평균보다 약 0.7%p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아파트 전세가 비중이 전국 평균을 상회해 매매시장의 안정성이 불명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광주·전남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간은 물론 공공마저도 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을 외면하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만 취해왔다는 의미다.

나 책임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하며,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광주·전남 지역민의 가처분 소득증대와 공동체 가치 구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버주택, 공동체주택, 청년지원주택, 부분임대형 주택 등 다양한 단독주택과 복합용도주택 공급 추진을 제안했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국제발행을 통해 임대주택 재원을 마련해 세일스&리스백(Sales&Leaseback)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놴다. 세일스&리스백이란 주택 이외의 노후자금이 부족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을 국가가 매입하고 해당주택에 주거를 허용하면서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는 특히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개발·건설에서 관리·재생 등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등 주택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책임연구위원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주택의 구매수요가 점차 감소되는 등 주택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며 “광주·전남은 실수요계층을 고려한 다품종 소량공급 시대에 맞는 주택 공급 및 행정서비스가 그 어느 지역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구성할 것”

도종환 문화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장관으로 취임하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운영할 계획”이라며 “활동 내용을 백서로도 남기겠다”고 밝혔다. 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예술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다. 문화예술계의 참여하여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 지표의 하나로 내세운 만큼 문화정책을 강조한 점은 평가할 수 있지

만, 이면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의 수단화 등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에는 지원사업 심사과정 공개법위를 확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재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는 전교조의 성격 및 활동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으며, 합법화 여부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존중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놴다. 그러면서 “국회에도 합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국회의 입법논의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여성재단 대표 염미봉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특위 “업무 수행 문제 없다”

광주시의회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 염미봉 후보자에 대해 ‘업무 수행에 큰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일부 후보자에 대해 대표이사 응모를 권유한 광주시 집행부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인사청문 특위는 이날 내용은 보고서에서 염 후보에 대한 장점으로 여성의 전화와 성폭력상담소장 등 피해여성 지원과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현장 경험을 높이 샀다. 또 “일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분명하고 여성재단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여성재단 사업계획 등을 살펴볼 때 여성재단 운영의 문제점도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위는 그러나 “독특하면서도 상정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재단의 발전 방안이나 미래상 광주여성운동의 과제 등에 대해서는 협소한 안목을 보여줬다”는 취지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어 “기부금을 자녀 이름으로 대납해 자녀가 직장에서 연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한 것과 강의료 수입에 대한 소득세 신고 누락 등은 리더십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광주시가 3차례 응모 기간 특정 후보자들에게 응모를 권유한 것에 대해서는 후보 임용 절차상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인사청문특위는 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14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후 절차를 거쳐 시장에게 송부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도교육청 등 7개 기관·단체 나눔문화 앞장

기부문화 확산 업무 협약

전남도와 도교육청 등 7개 기관·단체는 12일 도민들의 나눔문화 실천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온정나눔 캠페인 및 행복기부함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만채 도교육감, 이흥목 농협전남지역본부장, 노진영 전남사회복지협의회장, 우천식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본부장, 이해경 목포YWCA 회장, 김승철 농협목포유통센터 사장,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기부식품 제공 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교육청과 중소기업지원센터, 목포YWCA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온정나눔 행복기부함을 청사에 설치해 공무원과 임직원, 이용자가 기부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협전남지역본부와 농협목포유통센터는 행복기부함을 매장에 비치해 채고 및 잉여물품 기부를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게 된다. 전남사회복지협의회는 광역푸드뱅크는 행복기부함 및 기부자를 유지·관리하고 기부되는 물품을 월 1~2회 정기 수거해 투명하고 공정한 분배를 맡는다.

전남도는 청사에 기부함을 비치하고, 우수 기부자 선정 표창과 기부함 제작지원 등 ‘온정나눔 캠페인 및 행복기부함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113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062-364-8800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